



일본, 아베노믹스 가속화

최 원 선임연구원

- 구로다 하루히코(黒田東彦) 일본은행(BOJ) 총재 내정자는 아베 신조(安倍晋三) 내각의 경제정책¹⁾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과감한 금융완화에 나설 것임을 밝힘.
 - 구로다 총재 내정자는 3월 4일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본은행(BOJ)의 사명이라고 밝힘.
 - 구로다 총재 내정자의 국회 참석은 일본은행 총재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며, 현 아시아개발은행(ADB) 총재인 그는 3월 19일 사임하는 시라카와 마사아키(白川方明) 현 일본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취임할 예정임.
 - 또한 구로다 총재 내정자는 아베 신조 내각이 내세운 2%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, 향후 2년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.
 - 한편, 구로다 총재 내정자는 금융완화를 위해 일본은행이 매입 중인 3년 이하의 국채보다 기간이 긴 장기국채를 매입대상에 포함시켜, 국채 매입규모를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함.
- 구로다 총재 내정자가 대표적인 성장론자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 아베노믹스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, 그의 금융완화 지지 발언 이후 일본 장기국채 금리가 9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
 -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이 채권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됨.
 -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3월 4일 종가 기준 0.616%를 기록하여 2003년 6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냄.
 - 3월 4일 2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.516%를 기록하며 9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, 5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장중 0.095%로 사상 최저를 기록함.

1) 아베 신조 총리는 물가상승률 2%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부양과 양적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『아베노믹스』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

■ 한편,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, 이에 동조하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음.

- 편의점 업체인 로손은 지난 2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의 정규직원 약 3,300명의 연봉을 2013년부터 평균 3% 정도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, 일본의 유통 대기업인 세븐&아이 홀딩스는 그룹내 54개사 직원 5만 3,500명에 대한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함.
- 유통업의 경우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지고 이러한 소비 흐름이 실적 확대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 움직임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-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도 논의되고 있어 3월 둘째 주부터 본격화되는 자동차·전기전자 업체들의 노사협상에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너스 지급 등 임금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■ 그러나 여전히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대립하고 있음.

- 일부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수익 확대가 투자를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인한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, 이번 기업들의 임금 인상 조치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.
 - 나가하마 도시히로(永浜利廣)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임금 1% 상승이 민간 소비를 0.54%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하였음.
 - 일본 정부는 최근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세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으며, 경기부양 효과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13년 경제성장률은 2.5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-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베노믹스 정책이 진정한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함.
 -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소비가 위축될 수 있음.
 - 엔화 약세에도 수출기업들의 수익이 확대되지 않고 경제회복 속도보다 물가상승과 재정적자 누적이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경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음.
 - 국제적으로도 엔화 약세 현상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도 존재함.
- 한편, 아베노믹스가 중장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완화,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, 자유무역협정(FTA) 추진 등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.

(니혼게이자이(日本經濟), 마이니치(毎日) 신문 등)